

東西獨 經濟・社會統合 事例研究

1991. 12.

1. 이 책자는 통일원의 남북교류협력 대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촉된 특수과제 용역결과 보고서임.
2.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일 뿐 발행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임.

東西獨 經濟 · 社會統合 事例研究



研究責任者：金 在 慶(韓南大)

統 一 院
交 流 協 力 局

目 次

I. 序 論	3
II. 統一 前 東獨의 經濟力과 社會狀況	5
III. 經濟·通貨·社會統合 後의 東獨의 狀況	6
1. 經濟狀況	6
2. 社會狀況	8
IV. 東獨 經濟危機의 原因	14
1. 落後된 生産性	14
2. 東獨人들의 東獨商品 忌避	14
3. 蘇聯과 東歐로부터의 注文 減少	14
4. 行政機關의 機能問題	15
5. 劣惡한 社會間接資本	15
6. 所有權 紛爭	16
7. 東獨人들의 思考方式	17
8. 信託管理廳의 問題	17
V. 問題解決의 展望	20
VI. 獨逸의 經濟·社會統合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35

I. 序 論

獨逸의 統一過程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그 결과를 미처 예견할 수 없었다. 외형상 즉, 헌법상 이 과정은 1990년 10월 3일 종결되었다. 西獨基本法 23條의 의거하여 東獨의 5개 주¹⁾가 聯邦에 가입함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DDR)은 해체되었고 東獨住民들은 종전과는 다른 사회질서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東西獨間 국경선이 개방된 하루 후인 1989년 11월 10일 빌리 브란트 前 西獨總理는 베를린의 쇠네베르크 시청 앞에서 “함께 속하는 것은 함께 자란다.”고 말했다. 이때 그가 함께 자란다고 한 것은 1990년 10월 3일에 국가적 통일이 달성됨으로써 종결된 하나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지, 이 과정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0년 7월 1일의 통화·경제·사회통합 이래의 獨逸 국내 상황의 전개는, 이 공동성장과정의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1990년 3월의 총선거에서 東獨 사람들은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아 보려는 꿈에 부풀어 社會主義를 버리고 資本主義 西獨과의 통일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일년 후 그들은 경제불안과 실업문제 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대하여 항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시위가 계속되었고 시위군중들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며 일자리의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헬무트 콜 총리의 퇴진, 총선거 재실시, 信託管理廳의 개편 등을 요구하였다. 칼 오토 폴(Pöhl) 獨逸 聯邦銀

1) 1990년 8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에 체결된 통일조약에는 동독지역의 5개 주가 5個 新聯邦州(Fünf Neue Bundesländer) 또는 5個 新州(Fünf Neue Länder)로 표기되어 있고 독일정부와 정당, 학계와 언론계에서 이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5개 신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브란덴부르크州(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아포메른州(Mecklenburg - Vorpommern),
작센州(Sachsen),
작센안할트州(Sachsen - Anhalt),
튀링겐州(Thüringen).

行 총재는 1991년의 東西獨間 화폐통합은 하나의 재앙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그에 동감하고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獨逸의 시행착오는 귀중한 교훈으로 되고 있다. 통독 후 야기된 경제·사회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통일과정상 어떠한 잘못이 있었으며 그 해결전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경제·사회통합 실현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統一 前 東獨의 經濟力과 社會狀況

獨逸 聯邦經濟省의 내독경제관계 담당 고위관리인 프리츠 호만 박사(Dr. Fritz Homann)가 서술한 東獨의 경제현실은 다음과 같다.²⁾

- 東獨經濟의 생산설비는 대개의 경우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다.
- 東獨經濟의 生産性은 1950년대의 西獨經濟의 그것과 맞먹는다. 다시 말하면 평균 현재 西獨經濟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 과거 인민소유로 되어 있던 콤비나트에서 떨어져 나간 거의 모든 기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더욱 상실하였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다른 원인으로서는 社會主義 체제하에서 업적을 자극하는 경쟁이 기피된 중앙의 경제계획이 순기능적 분업을 보장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외에 외화획득이라는 유일무이한 목적하에서 실행된 다각적인 수출지원으로 외관상으로만 수출강화가 달성되었던 점을 지적하여야겠다.
-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수익성이 전혀 없는 기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농업부문에는 필요 이상으로 매우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 과거의 일자리 보장과 완전고용이라는 원칙은 실제로는 그것이 은폐된 고용의 실업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실질 실업률이 최고 30%까지였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약 2백 70만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 사회간접자본의 현상태는 현대공업사회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 통신, 도시건설 부문에 엄청난 결함이 존재한다.
- 환경오염이 대단하다. 과거 東獨當局은 환경보호에 무책임하였다. Ifo 연구소는 환경관련 부담을 2,100억 마르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2) Fritz Homann, 1991, "Strategie für die wirtschaftliche Erhol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utschland - Archiv*, 24. Jahrgang, Juni 1991, pp.608~609.

Ⅲ. 經濟·通貨·社會統合 後の 東獨의 狀況

1. 經濟狀況

통일 후 옛 東獨地域이 당면한 가장 엄중한 문제는 經濟危機이다. 페터 크리스트는 금년 2월 東獨地域의 경제사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³⁾

옛 東獨地域의 모든 경제부문이 붕괴 직전에 있다. 공업과 농업 및 수공업이 몰락하고 있다. 東獨의 생산품은 1990년 7월 1일 발효한 經濟 및 通貨統合 이래 밀물처럼 밀어닥친 西方 商品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였다. 1990년 3/4 분기에 금속공업생산은 거의 2/3 만큼 축소되었고, 식품생산은 60%, 기계제작업과 차량제조업은 35%의 감소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공업생산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990년 한 해 동안 東獨地域의 국민총생산은 약 20% 감소하였으며 1991년에 공업생산은 10% 더 감소할 것으로 연초에 전망되었다. 西獨의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불황이 1975년에 닥쳐왔는데 당시 국민총생산의 감소가 겨우 4%에 불과했음에도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가 유발되었던 것이다.

페터 누넨캄프 박사는 통일 후 東獨地域의 경제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⁴⁾

東獨工業의 몰락은 通貨統合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東獨工業生産은, 물량 기준으로 해서 1989년 1/4 분기를 100으로 잡을 때, 1990년 2/4분기까지는 9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通貨統合 직후인 1990년 3/4 분기에는 1/2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4/4 분기에는 48.4를 기록하였다(표 1). 감소추세는 계속되어 공업생산은 1991년 6월 현재 1989년 水準의 1/3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도 1/4 만큼 줄어든

3) Peter Christ, 1991, "Erst die Einheit, nun die Pleite", *Die Zeit*, 15. Febr. 1991, p. 1.

4) Peter Nunnenkamp, 1991, "Die wirtschafts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der Umwandl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제9회 한독 경제문제 심포지움(서울: 1991. 9. 16~17)에서 발표된 논문.

〈表 1〉 東獨地域 經濟指數^{a)} (1989~1991)

구 분	1989년				1990년				199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 ^{b)} (자영업자)	100.0 100.0	100.0 100.0	98.9 101.1	98.2 101.1	96.5 113.7	92.2 158.8	88.2 198.9	82.5 229.7
실업자(千명)	0	0	0	0	13	83	309	557	757	787	808	837
단축노동자(千명) (정상노동시간의 1/2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 : %)	0 0	0 0	0 0	0 0	0 0	0 0	1295 .	1736 38.2	1841 48.9	1947 54.0	2002 56.3	2005 56.3
서독근무 동독거주자(千명)	0	0	0	0	15	27	79	183
취업자 1인당 월급여	100.0	88.0	88.5	92.5	110.3	111.1	100.9	113.0
시간당 임금	100.0	88.4	95.0	94.1	109.9	103.1	116.5	139.7
공업생산 : 물량기준 가격기준	100.0	104.3	103.8	99.6	95.2	91.2	50.6 100.0	48.4 91.7
공업생산성 :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당	100.0 100.0	103.9 104.9	103.5 112.7	101.0 103.2	98.7 98.7	98.5 101.1	60.2 67.7	65.1 75.0
공업부분의 노동비용 ^{c)} : 유상노동시간당 실질노동시간당 ^{d)}	100.0 100.0	84.4 85.6	85.5 93.2	91.6 93.9	111.8 111.8	112.8 115.8	167.8 188.9	173.8 200.4

주 : a) 1989년 1/4분기를 100으로 잡았음. 단 가격기준 공업생산은 1990년 3/4분기를 100으로 잡았음.
 b) 자영업자수는 1989년 1/4분기에 무보수로 일한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182,000 이었음.
 c) 공업부분의 총급여를 공업생산량으로 나누었음; 공업부분의 임금상승률이 전체경제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d) 취업자당 실질노동시간이 단축된 경우 이를 반영하였음.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 Gemeinsames Statistisches Amt der neuen Bundesländer;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일부는 추정치임. Peter Nunnenkamp, *Die wirtschafts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der Umwandl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p.5 에서 재인용.

것으로 추산된다.⁵⁾

눈넨캠프 박사는 1991년 가을에도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공업생산이 1990년 전반기 水準의 1/4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표 2>.

공업부문에서 체계적인 구조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생산설비와 새 상품을 목표로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구조개편이 가능한데,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東獨經濟가 세계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져 생산이 증가하고, 반면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의 생산은 감소할 법한데, 東獨經濟에 관한 한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단기적으로는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모든 주요 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현격하게 감소됐다<표 2>.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사정은 공업부문처럼 나쁘지는 않다<표 2>. 건설업은 국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호황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곧 힘찬 호황의 선도자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으나 이 기대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수공업의 많은 부문에서도 형편이 좋아졌다. 장차 상업과 서비스업에서 활력이 기대된다고 눈넨캠프 박사는 내다봤다.⁶⁾

經濟統合 이후 工業生産性이 취업자 1인당으로 볼 때나 노동시간당으로 볼 때 1989년 水準의 3/4 내지는 2/3 水準으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공업부문의 노동비용은 노임이 지급된 노동시간상으로나 실제로 일을 한 노동시간상으로 볼 때, 1989년 대비 약 70% 내지는 100% 증가하였다<표 1>.

2. 社會狀況

공업과 농업, 수공업이 몰락한 결과 실업과 단축노동이 계속 증가하였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완전실업자수가 1990년 12월 말 현재 64만 명이

5) Peter Nunnenkamp, 1991(앞의 글), p. 4.

6) Peter Nunnenkamp, 1991(앞의 글), p. 8.

〈表 2〉 東獨經濟의 總價値創出(經常價格, 1990~1991)

구 분	절대치(단위 : 10억 DM)						전년 대비 증감(단위 : %)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농업과 임업	6.9	5.9	3.1	3.7	2.8	3.2	-37.5	-13.4	-23.6	-45.8	-12.4	-14.2
광업과 제조업	109.3	60.8	72.1	37.1	31.1	29.6	-28.4	-44.4	-6.6	-50.7	-56.8	-20.2
(공업)	91.0	38.3	63.2	27.7	21.1	17.1	-31.9	-57.9	-7.1	-57.7	-66.6	-38.2
(수공업)	18.3	22.5	8.9	9.4	10.0	12.5	-4.4	22.8	-3.8	-4.2	12.4	32.7
건설업	19.9	24.0	9.5	10.4	10.1	13.9	-6.4	20.5	-7.8	-5.1	5.8	34.1
상업	14.9	15.2	8.0	6.9	6.9	8.3	-10.8	1.9	0.2	-21.0	-13.8	20.3
운수업	19.9	24.3	10.8	9.1	9.7	14.7	-17.8	22.3	-11.7	-24.1	-10.6	61.7
서비스업	33.4	46.6	15.0	18.4	19.8	26.8	23.4	39.3	11.8	34.8	31.7	45.4
정부	37.2	41.7	18.1	19.1	19.4	22.3	4.1	12.1	1.7	6.4	7.1	16.7
총국내생산	238.3	221.1	133.9	104.5	100.4	120.7	-16.6	-7.2	-5.4	-27.5	-25.0	15.5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자료;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계산과 추정치.

고, 단축노동자수는 180만 명이였다. 완전실업자수는 1991년 1월 말 현재 76만 명, 2월 말 현재 7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단축노동자수는 각각 186만 명과 190만 명으로 늘어났다.⁷⁾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전인 198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실업자와 단축노동자의 수가 通貨統合 후에, 즉 1990년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 4월 현재 완전실업자수가 80만을 초과하였고 단축노동자수는 200만을 초과하였다. 1991년 6월 현재에도 약 280만 명이 완전실업자이거나 단축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⁸⁾ 자영업자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東獨에 거주하면서 西獨으로 출근하는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東獨의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표 1〉.

완전실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노동청으로부터 그가 해고되기 직전에 받던 급여의 63%(어린이가 없을 경우) 내지는 68%(어린이가 있을 경우)를 받는다. 단축노동자에게는 일을 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없는가 있는가에 따라 정상 임금의 63% 내지는 68%가 지급된다. 전체 단축노동자의 약 절반이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은 완전실업자의 소득과 같다. 단축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페터 크리스트는 1991년 2월 현재, 실업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전망도 하였다.⁹⁾

완전실업자와 단축노동자 이외에 약 50만 명의 남녀가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기정년퇴직을 강요당하였다. 이들에게 실업자의 운명을 면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단축노동자와 조기정년퇴직자는 사실상 실업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취업가능인구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이제 실업률은 40%를 위협하

7) Peter Christ, 1991(앞의 글), 한겨레신문, 1991년 3월 23일, 7면. 이 수치는 〈표 1〉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난다.

8) *Der Spiegel*, 28/1991(8.Juli 1991), p. 85.

9) Peter Christ, 1991(앞의 글).

고 있으며 금년 6월 말이 되면 실업자수는 급증할 것이다. 금속공업부문에서 해고 유예기한이 이 시기에 만료되고 공공부문에서도 이때쯤 대량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실질실업률이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 공공소유로 되어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는 것들은 폐업될 것이고 이때 더 많은 실업 사태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래 9백만을 밑도는 일자리 중에서 350만 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수치는 히틀러의 집권을 저지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실업률을 웃도는 것이다.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각급 지방자치기구의 재정 형편도 말이 아니다. 어떤 주에서는 공직자들에게 3월부터는 봉급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계가 어려워니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와 西獨地域의 주정부들이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은 금년에만도 약 500억 마르크의 재정적자에 당면할 것이라고 금년 2월 현재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들의 조세수입만으로는 겨우 경상세출의 2/3를 감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투자, 도시재건, 주택건설, 환경정화를 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재정난은 하급 자치기구에 이어진다. 일부 市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였다.

1991년 1월에는 체신부 직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고 2월 20일에는 35,000명의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로스토크에서 경제파탄에 항의하여 시위를 하였다.¹⁰⁾ 3월 18일에는 통일 전 민주화 시위의 요람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6만여명이, 그리고 東獨 전역에서는 10만명 가량이 시위를 벌였다.¹¹⁾ 이는 통일 후 東獨地域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1989년 가을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에 열려 社會主義體制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 유명한 ‘月曜示威’

10) *Neues Deutschland*, 1991. 2. 21 ; *Frankfurter Rundschau*, 1991. 2. 22.

11) 한겨레신문, 1991. 3. 23.

가 부활된 것이다.

일년 전 총선거에서 東獨 인민들은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꿈에 부풀어 社會主義를 버리고 資本主義 西獨과의 통일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일년 후 그들은 실업문제 등 경제불안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대하여 항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후 항의시위는 매주 월요일 몇번 더 계속되었다. 3월 25일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많은 주요도시에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시민운동 단체와 노조의 주도하에 시위에 참가하였다.¹²⁾ 시위군중들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며 일자리의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헬무트 콜 총리의 퇴진, 총선거 재 실시, 信託管理廳(Treuhandanstalt)의 개편 등도 요구하였다.

東獨地域에서 통일 후의 불만, 실망, 장래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옛 집권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의 당세 확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반대로 PDS의 당세는 줄어들었다. 1990년 5월 현재 PDS의 東獨人 당원수는 345,000명이었는데 일년 후인 1991년 5월에는 그 수가 오히려 250,000명으로 축소되었다. 유권자의 지지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월 2일의 총선거에서 PDS는 東獨地域 투표자의 11%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일년 후의 슈피겔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PDS에 대한 東獨人들의 지지도는 8%로 하락하였다.¹³⁾

통일 후의 형편에 대하여 東獨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금년 중반에 이르면 사태가 악화되어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東獨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통일 전 장미빛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했던 중앙정부관리들과 경제전문가들을 원망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분명한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연방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슈피겔지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¹⁴⁾ 東獨人들의 49%는 현재 통일 자체

12) 한겨레신문, 1991. 3. 27.

13) *Der Spiegel*, 22/1991(27.Mai 1991), p. 53.

14) 이하 *Der Spiegel* vom 22.07.1991. 여기서는 한겨레신문 1991년 7월 24일자 6면에서 재 인용.

를 후회하고 있으며, 東獨人들과 西獨인들이 통일 이후에 오히려 서로를 더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東獨人들은 西獨人들을 '거만하다'고 여기는 반면, 西獨人들은 東獨人들을 '게으르며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1991년 6월과 7월에 걸쳐 여론조사기구인 엠니트가 東西獨人 1천 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응답자가 상대방 지역민을 좋아하는 정도를 -5에서 +5까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西獨人들이 東獨人들을 좋아하는 정도는 1.1, 東獨人들이 西獨人들을 좋아하는 정도는 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의 조사 결과인 2.0과 2.7에서 각각 0.9와 1.0포인트씩 떨어진다. 또 西獨人들이 東獨 출신 동포들보다는 미국인, 프랑스인, 蘇聯人, 오스트리아인들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東獨人들과 西獨人들 사이의 심리적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東獨人들 가운데 84%는 스스로를 統一獨逸의 '2등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0년 10월 조사 때의 75%보다 9% 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 東獨人 응답자들의 63%는 西獨이 東獨을 마치 식민지처럼 점령해 버렸다고 대답했으며, 92%는 東獨이 西獨商品의 판매시장으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西獨人 응답자들의 73%가 東獨人들이 일은 옛날처럼 게으르게 하면서 시쪽과 비슷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1년 한 해에만 1천5백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갈수록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西獨人들의 51%가 통일로 인하여 東西獨이 가까워졌다고 응답한 반면, 東獨人들의 50%가 통일로 인해 東西獨이 더 멀어졌다고 응답했으며, 49%는 아예 통일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통일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한 가운데 東獨人들의 83%는 과거 공산체제의 사회보장제도가 현재보다 우수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두 체제의 장점을 다 같이 살리지 못한 성급한 吸收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IV. 東獨 經濟危機의 原因

그러면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흔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落後된 生産性

우선 東獨 生産품이 西獨 및 西方 商品에 대하여 경쟁력이 없는 점이다. 東獨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와 설비가 매우 낡아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商品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東獨의 전직 고위관리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獨의 社會主義體制가 붕괴하게 된 주요한 경제적 원인이기도 하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東獨經濟의 生産性은, 업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 西獨 經濟生産性의 약 30%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西獨側으로부터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2. 東獨人들의 東獨商品 忌避

東獨人들이 무조건 西方商品을 선호하는 점이 문제로 되고 있다. 東獨人들이 자기들이 만든 물품을 사지 않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西獨 및 西方의 물품을 구매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東獨製品 중에는 西獨商品보다 우수한 것이 있는데도 東獨人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東獨의 경제위기가 가증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東獨人들의 의식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3. 蘇聯과 東歐로부터의 注文 減少

통일 전 東獨의 최대 고객은 蘇聯이었다. 두 나라간의 거래는 태환성이 없는 루

블화로 결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 東西獨 間의 通貨統合의 결과 東獨도 西獨마르크화 지역으로 되었고 蘇聯과 동유럽국가들도 東獨商品에 대하여 태환성이 있는 硬貨, 즉 마르크화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외환사정이 나쁘고 경제적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蘇聯과 다른 동유럽국가들로부터 금년에 들어와서 주문이 대폭 감소되었다. 50만 이상의 일자리가 蘇聯의 주문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4. 行政機關의 機能問題

통일 후 東獨地域에서는 행정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에는 변화된 여건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특히 재정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뿐만 아니라 자금도 부족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西獨의 공무원과 경영인이 더 많이 東獨地域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西獨人들은 東獨 근무를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과 승진면에서 특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심지어는 東獨에서 최소한 2년을 근무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5. 劣惡한 社會間接資本

東獨에는 현대적인 산업하부구조(인프라스트럭처)가 결여되어 있다. 전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금도 東西獨間에 전화통화하기란 매우 힘들다. 20세기 말에 그것도 유럽의 중앙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西獨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철도, 운하, 비행장, 폐수처리시설, 하수도망 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1997년까지 550억 마르크를 들여서 전화망을 현대화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산업하부구조 개선방안이 공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한데 지방자치기구들이 자금도 없고 이를 계획·조직할 사람도 부족한 실정이다.

6. 所有權 紛爭

社會主義에서 資本主義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의 하나는 所有權 紛爭이다. 과거 社會主義 東獨의 소유원칙에 의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로 말미암아 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양분된다. 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실현되면 계급간의 적대관계는 제거되고 하나의 계급 없는 사회로 발전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과거 東獨의 사회적 소유제도는 공식 표현에 따르면 유산계급의 재산몰수 결과이며 사회가 생산수단을 전유한 결과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는 모두 인민소유 아니면 협동소유였다. 생산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가 인정되었다.

통일조약에서 東西獨은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즉 蘇聯 군정시기에 단행된 재산몰수는 환원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東獨 國家 수립 후에 실시된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統一獨逸 전체에 하나의 단일 소유질서를 확립한다. 즉 국가배상보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1991년 5월의 보도에 의하면 약 130만 건의 財産返還申請書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약 절반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¹⁵⁾ 이로 말미암아 행정업무가 막히고 西獨과 西方側으로부터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가 부분적으로 파기되었고 東獨의 공무원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등기서류를 한 줄로 늘어 놓는다면 그 길이는 약 14km나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원소유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정이 내려진다면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소송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所有權 紛爭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기업가는 없을 것이다. 東獨의 기업들이 서쪽으로부터의 투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유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아서 서쪽의 자본가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 ‘배상보다는 반환

15) *Der Spiegel*, 22/1991(27. Mai 1991), p. 125.

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배상을 우선시키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7. 東獨人들의 思考方式

東獨人들 사이에 市場經濟的 사고방식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적극성, 창의성, 업적을 올리려는 의지와 같은 市場經濟體制에 불가결한 중요한 속성이 社會主義體制下에서 당과 국가의 후견인적 활동으로 인하여 장기간 움츠러들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의 전환과정이 일어나서 東獨人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東獨人들이 兒童人性을 갖고 있다.

8. 信託管理廳의 問題

信託管理廳은 1990년 3월 15일 인민소유재산을 신탁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출범하였고, 1990년 6월 17일의 人民所有財產의 私有化와 再組織을 위한 法에 근거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조직면에서 信託管理廳이 틀을 잡은 것은 1990년 10월 3일 이후라고 하겠다. 1991년 2월 현재 약 1,000명의 인원이 약 6백만명이 고용된 8,000개의 기업을 관리하였다. 당시 信託管理廳이 관리하는 기업의 총자산은 6,000억 마르크로 추산되었다.¹⁶⁾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다. 슈피겔지 보도에 의하면¹⁷⁾ 1991년 3월 현재 信託管理廳의 인원이 2,065명으로 늘어났고 연말까지 1,000명을 더 고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무의 핵심은, 산하 기업들을 민간인에게 매각하느냐 아니면 자생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자생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信託管理廳 이사회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쟁점으로 되었다. 업무

16) Roland Winter, 1991, "Entscheidungsprozess mit Schwierigkeiten," *Das Parlament*, Nr. 9/1991. 2. 22, p. 11.

17) *Der Spiegel*, 12/1991(25. März 1991).

지침은 원칙적으로 사유화시키되 우선적으로 자생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원래의 의도는 일부 기업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자생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자생능력을 갖춘 기업 역시 민간인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1991년 초까지 매각 처분된 기업의 수는 약 700개에 불과하다. 1991년 말까지도 6,000개 내지 7,000개의 기업이 信託管理廳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기업들을 폐쇄시킬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실업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1년 초까지만 해도 信託管理廳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信託管理廳은 자주 신문의 머리기사를 장식하였고 그 기능과 문제점들은 문자 그대로 '獨逸의 冒險'으로 되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信託管理廳長 로베더(Rohwedder)는 東獨노동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 되었다. 그는 얼마 안가서 암살되고 말았다.

로베더 청장이 암살된 후에 信託管理廳은 그 업무능력이 본궤도에 올랐고 그의 뜻에 부응하는 분명한 정책노선을 갖게 되었다고 호만 박사는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私有化 優先 原則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유화를 우선시킨다. 사유화가 東獨 지역경제를 재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計劃經濟로 망한 것을 市場經濟로 살려야 하고 市場經濟는 私的 經濟를 의미한다. 우선 순위를 거꾸로 바꾸게 되면 일자리를 새로이, 그리고 안전하게 창출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積極的 自生能力 回復

信託管理廳은 관리기업들의 자생능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였다. 현재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나타났다가 하더라도 국가의 투자장려정책

18) 이하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p. 615~616.

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관망하려 하기 때문에 사유화가 당장 실현될 수 없는 형편이라면, 信託管理廳에 의한 관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생능력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확실한 구상을 스스로 개발하여야 한다. 實務專門家理事會는¹⁹⁾ 최근 특별평가서를 통하여 信託管理廳이 그 관리기업들의 자생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그 활동 역점을 분명히 바꾸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만 박사는 東獨地域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였다. 하나의 기업이 현재 구매희망자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업을 해체하기로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Ifo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西獨地域 기업의 82% 가량이 향후 2년 동안은 東獨地域에 투자할 의사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東獨地域 기업들의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西獨의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東獨地域 기업들의 자생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信託管理廳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廢業時의 社會問題 考慮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기업의 폐업이 불가피할 수 있다. 구매자도 나타나지 않고 자생능력의 회복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때 국가도 무한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폐업이 불가피하더라도 실업사태를 최소화하여 사회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이 信託管理廳의 한 가지 방침이다. 종래에는 지급불능과 청산이 흔히 일자리의 파괴를 의미하였다. 실제에 있어서는 청산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물적 자원 속에 어느 정도 가치가 남아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산기업의 구성부분을 구매하여 과거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들이 있다.

19) Sachverständigenrat의 번역이다.

V. 問題解決의 展望

東獨地域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신연방주들의 경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온 조치는 100가지가 넘는다. 연방경제장관이 실시한 개별조치만도 40가지가 넘는다. 이 내리막길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호만 박사는 주장한다.²⁰⁾ 흔히 정치가들이 몇년 이내로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東獨地域 주민들의 실망은, 바로 정치가들의 정치성 약속 때문에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다.

東西獨間의 생활처지를 순조롭게 근접시키고 東獨地域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서방의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는 서방의 자본에게 매력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잘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여야 하고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재의 장애물들, 특히 所有權問題의 해결과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의 개선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되도록 빨리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¹⁾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西獨의 企業들이 東獨地域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표 3>.

- 市場 : 상품판매시장이 근처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
- 環境 :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
- 債務 : 東獨企業의 과거 부채;
- 過剩雇傭 : 해당기업에 필요 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음;
- 收益性 : 수익성이 나쁘고 과다한 비용이 예상됨;
- 技術水準 :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음;

20) 이하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 610.

21)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 610.

〈表 3〉 東獨工業의 現況과 西獨企業들의 投資意慾(獨逸 經濟團體들의 評價)^{a)}

업종	금년 경제동향	동독기업인수의사	투자동기	투자저해요인
광업	-	없음	없음	환경, 채무, 과잉고용, 수익성
석유제조업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돌과 흙	+	있음	무응답	무응답
제철공업	-	개별적 경우	무응답	기술수준
비철금속공업	-	없음	없음	환경, 과잉고용
용강업	-	없음	없음	불필요
화학공업	무응답	개별적 경우	시장	환경, 행정
목재업	무응답	개별적 경우	없음	무응답
고무가공업	무응답	없음	없음	생산구조, 환경, 불필요, 임금
강철공업	-	없음	시장	생산구조
기계공업	-	있음	무응답	규모, 생산구조
차량제조업	-	개별적 경우	시장	사회간접자본, 임금, 환경, 채무
조선업	-	없음	없음	수익성, 생산구조, 불필요
전자기술	무응답	있음	시장	행정
전산화업	무응답	없음	무응답	규모
요업	-	적음	무응답	불필요, 기술수준, 제품의 품질
제지업	-	무응답	무응답	채무
인쇄업	무응답	적음	무응답	규모
화학제품	무응답	없음	무응답	규모, 기술수준
가죽공업	-	없음	없음	수익성, 생산구조
섬유공업	-	개별적 경우	없음	
의류업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수익성
식품업	무응답	있음	시장	소유관계, 환경, 임금

a) 몇몇 업종의 경우 기업대표가 해당 업종에 대하여 평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

〈용어설명〉

- - 많이 악화됨; - 약간 악화됨; + 지속적 발전;
- 시장: 인접시장, 시장확보 내지는 현지생산이 필요한 경우;
- 환경: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
- 채무: 동독기업의 과거 부채;
- 과잉고용: 해당 기업에 필요 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음;
- 수익성: 수익성이 나쁘고 과도한 비용이 예상됨;
- 기술수준: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음;
- 불필요: 현존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충분함;
- 행정: 동독지역의 행정기능이 미흡함;
- 생산구조: 생산구조가 부적합함;
- 대금: 임금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름;
- 사회간접자본: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 규모: 동독기업들의 규모가 서독의 중산층에게 너무 크거나 중산층은 하나의 입지만을 원함;
- 소유관계: 소유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

출처: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설문조사. Peter Nunnenkamp, *Die wirtschafts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der Umwandl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p.22 에서 재인용.

- 不必要 : 현존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충분함;
- 行政 : 東獨地域의 행정기능이 미흡함;
- 生産構造 : 생산구조가 부적합함;
- 賃金 : 임금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름;
- 社會間接資本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 規模 : 東獨企業들의 규모가 서독의 중산층에게 너무 크다;
- 所有關係 :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

이 목록을 보면 東獨 내의 생산환경과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의 重點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와 효율적인 행정구조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獨逸聯邦政府는 이미 1990년에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여 민간투자의 길을 닦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東獨地域의 州와 市郡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1991년 1월의 연방정부의 결정 내지는 5개 신연방주 首相들과의 타협의 결과로²²⁾ 東獨地域에 1991년 100억 마르크가 추가로 지원된다. 그밖에 '동부지역 진흥공동체사업'²³⁾이라 불리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1991년과 1992년에 총 240억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그전에 결정된 원조계획까지 합하면 신연방주를 위하여 총 1,000억 마르크 이상이 책정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마련한 '동부지역진흥공동체사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²⁴⁾

地方自治團體의 公共投資 促進策

연방정부는 5개 신연방주가 당장 지방사업 투자재원으로 1991년에 쓸 수 있는

2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지역에 '독일통일기금'에서 추가재원을 제공하고 동독지역 주정부도 부가가치세 세입에서 완전한 몫을 차지한다. 당초에는 동독지역 주정부에 부가가치세 세입이 제외되었었다.

23) Das Gemeinschaftswerk Aufschwung-Ost의 번역으로 이는 연방경제장관의 주창으로 성립되었다.

24)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p. 610~613.

자금 50억 마르크를 준비해 놓았다. 이미 1991년 2월에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간에 이와 관련된 관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하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금은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들이고 신속히 공동투자를 집행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 자금이 단기적으로 행정기관의 재정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된다면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축업과 수공업 부문에서 곧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도급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엄청난 실업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의 조세납부자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경제호황은 노동집약적인 건축부문을 거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부문에서 수요는 거의 무제한이고 특별히 신속하게 고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民間企業의 投資促進 強化

현존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東獨地域의 경제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민간인들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광범위한 투자장려책을 새로운 요소로서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投資獎勵金

12%의 투자장려금을 1991년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다. 8%의 투자장려금의 기산점도 1992년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다. 이 조처에 추가해서 東獨地域 기업들은 영업세와 기업재산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이를 면제받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는 국내적 경쟁과 국제적 경쟁에서 東獨地域의 공업입지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東獨地域의 건축물과 설비에 대해서 50%의 특별감가상각을 인정해 주는데 이것 역시 이 지역의 공업입지를 강화시킨다.

地域別 特別支援計劃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6억 마르크가 특정지역의 특별지원계획을 위하여 계상되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문제지역에 이미 결정된 지역 개발예산 이외에 40억 마르크가 추가 지원될 것이다. 조선공업, 광업, 마이크로전자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 문제지역에 속한다.

技術資格化와 雇傭創出

고용창출과 기능자격화 사업은 '동부지역진흥공동체사업계획'의 한 가지 중점분야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왕에 승인된 재원 이외에 1991년용으로 25억 마르크 그리고 1992년용으로 30억 마르크가 추가로 책정되었다. 지금까지 예정된 130,000명 고용창출사업 이외에 1991년에 150,000명 고용창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1991년에 책정된 예산은 50억 마르크가 넘는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점은 인건비 이외에 물적 비용도 연방노동청이 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종래 이 비용은 용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고용창출사업은 신연방주들에서 현재 그리고 전망할 수 있는 장래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西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원 마련의 제한성 때문에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실업자들의 기능자격화 사업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연방주들의 생산입지는 직접적으로 강화된다. 인간자본(Humankapital)은 자원이 부족한 지역인 신연방주들이 국제적 입지경쟁에서 갖추고 있는 가장 가치있는 요소이다. 1991년에 350,000명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기능자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住宅建設과 都市建設

주택건설과 도시건설용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신연방주들을 위해서 각각 11억 마르크를 더 책정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중점사업이다.

- 주택의 현대화 및 주택개량 촉진. 이 사업에 난방장치의 기능 회복과 건물의 증축과 개축이 포함되는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마련될 경우 소

요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 자치단체 소유의 주택 매각 촉진. 이는 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각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임차인은 주택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 기념비 보호를 포함한 도시건설 촉진.

交通體系 改善

1991년과 1992년용으로 각각 14억 마르크와 42억 마르크가 교통망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도급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조속한 공사집행을 위해서는 연방과 구연방주들의 모든 동원 가능한 설계역량과 행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와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研究 促進

공업입지로서의 신연방주들에게 연구와 개발이 가지는 의미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현존하는 국립연구소와 기업 소속 연구소들의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연구 촉진은 계속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프로젝트와 개발프로젝트 및 연구소 차원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 1991년에 11억 마르크, 1992년에 115억 마르크가 연구부 장관(우리 나라의 과기처 장관에 해당)에 의하여 마련된다.

環境淨化

과거 社會主義 정권이 남긴 가장 나쁜 유산의 하나가 다름아닌 엄청난 환경문제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4억 마르크를 책정하여 환경보호 부문의 가장 시급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이거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보장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업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계획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地域別 特別支援計劃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6억 마르크가 특정지역의 특별지원계획을 위하여 계상되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문제지역에 이미 결정된 지역 개발예산 이외에 40억 마르크가 추가 지원될 것이다. 조선공업, 광업, 마이크로전자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 문제지역에 속한다.

技術資格化와 雇傭創出

고용창출과 기능자격화 사업은 '동부지역진흥공동체사업계획'의 한 가지 중점분야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왕에 승인된 재원 이외에 1991년용으로 25억 마르크 그리고 1992년용으로 30억 마르크가 추가로 책정되었다. 지금까지 예정된 130,000명 고용창출사업 이외에 1991년에 150,000명 고용창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1991년에 책정된 예산은 50억 마르크가 넘는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점은 인건비 이외에 물적 비용도 연방노동청이 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종래 이 비용은 융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고용창출사업은 신연방주들에서 현재 그리고 전망할 수 있는 장래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西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원 마련의 제한성 때문에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실업자들의 기능자격화 사업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연방주들의 생산입지는 직접적으로 강화된다. 인간자본(Humankapital)은 자원이 부족한 지역인 신연방주들이 국제적 입지경쟁에서 갖추고 있는 가장 가치있는 요소이다. 1991년에 350,000명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기능자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住宅建設과 都市建設

주택건설과 도시건설용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신연방주들을 위해서 각각 11억 마르크를 더 책정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중점사업이다.

- 주택의 현대화 및 주택개량 촉진. 이 사업에 난방장치의 기능 회복과 건물의 증축과 개축이 포함되는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마련될 경우 소

요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 자치단체 소유의 주택 매각 촉진. 이는 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각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임차인은 주택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 기념비 보호를 포함한 도시건설 촉진.

交通體系 改善

1991년과 1992년용으로 각각 14억 마르크와 42억 마르크가 교통망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도급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조속한 공사집행을 위해서는 연방과 구연방주들의 모든 동원 가능한 설계역량과 행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와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研究 促進

공업입지로서의 신연방주들에게 연구와 개발이 가지는 의미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현존하는 국립연구소와 기업 소속 연구소들의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연구 촉진은 계속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프로젝트와 개발프로젝트 및 연구소 차원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 1991년에 11억 마르크, 1992년에 115억 마르크가 연구부 장관(우리 나라의 과기처 장관에 해당)에 의하여 마련된다.

環境淨化

과거 社會主義 정권이 남긴 가장 나쁜 유산의 하나가 다름아닌 엄청난 환경문제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4억 마르크를 책정하여 환경보호 부문의 가장 시급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이거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보장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업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계획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최근에 핵심분야에서 달성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⁵⁾

所有權問題

배상보다는 반환을 우선시키느냐 아니면 반환보다는 배상을 우선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다 경제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해결책으로 귀결되었다. 1991년 3월 29일에 사유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법률이 의결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재산법(Vermögensgesetz) 제3조 a항에 다음과 같은 원칙이 규정되었다.

구소유자의 所有權 이전 청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고려한다. 투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所有權者는 그 소유를 반환받는다.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투자희망자가 기업용 부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까다로운 소유관계 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공공법인(대개의 경우 信託管理廳과 자치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은 해당부지가 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투자를 위한 것일 경우에 이를 투자희망자에게 당장 매각할 수 있다. 구소유자는 해당부지의 매도가격, 즉 완전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는다.

어려운 문제는 기업들을 재사유화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소유자는 재산법 제6조 a항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업고위간부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현재 사업중인 기업은 그 장래에 대하여 더 이상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구소유자가 해당기업을 반환받아 계속 경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투자용의를 가진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조항은 통일조약 내의 투자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보다 의식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제 信託管理廳과 자치단체가 새로운 조항을 신속하고도 일관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25)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p. 614~615.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기간에 집행된 몰수조치(토지개혁)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1991년 4월 23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법적 안정을 보장하고 그렇게함으로써 투자저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한다.

獨逸聯邦政府도 새로운 방침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연방재무성이 우선 시도한 시행령은 기업에 관한 것이다('기업시행령'). 기업의 전소유자가 해당기업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는 약 11,000건에 불과한데, 어떤 조건하에서 기업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가 또는 배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배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리라고 한다. 이는 경제계에 우선적으로 所有關係를 분명히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기업시행령'이 1백3십만 건 중 11,000건에 불과하지만 반환보다는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배상금액의 크기가 나머지 所有權 紛爭의 대부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모든 정책당국의 관계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이 '기업시행령'을 필두로 하여 1991년 말까지는 모든 所有權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연방재무장관은 시행령 시안의 내용에 대하여 함구령을 내렸다.²⁶⁾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49년 이후에, 즉 獨逸民主共和國 수립 이후에 몰수된 토지의 경우, 투자에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되거나 그동안 제3자가 정당하게 所有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배상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기간에 蘇聯軍事政府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에 대하여는 반환되지 않으나 1991년 4월 23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원소유자는 배상을 받는다.

배상에 관한 연방재무성의 복안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배상금액은 獨逸民主共和國이 법절차에 따라 재산을 몰수할 때 지급한 가치의 크기에 준한다. 이 금액은 가장 큰 경우에 현시가의 1/5에 해당된다. 이것도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

26) 이상 *Der Spiegel*, 22/1991(27. Mai 1991), p. 125.

나라, 연방재무성 관리들은 총배상금액을 대략 100억 마르크로 잡고 있다. 그리고 재산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즉 100,000마르크를 기점으로 해서 규모가 큰 재산일수록 배상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부동산을 반환받게 될 원소유자들로부터는 해당 부동산 현시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부터 西獨에서 거주하는 東獨 피난민들이다. 이들이 납부하는 돈은 ‘연방특별재산’²⁷⁾ 이라는 기금으로 집중시킨다. 그 밖에 信託管理廳도 일정 금액을 내고, 1949년 이래 東獨에 잔류하면서 토지를 유리하게 매입하여 통일 후 갑자기 엄청난 재산증식을 하게 된 옛 東獨 시민들도 재산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재산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環境 關聯 過去의 負擔

또 다른 중요한 투자저해요인으로 현존하는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1991년 3월 29일에 환경법이 개정됨으로써 투자자가 받게 된 실질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에 대한 책임을 해당 州가 공법상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면제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면제는 예컨대 하나의 새 기업이 세워질 토지에도 확대 적용된다.
- 종전에는 책임면제가 예를 들면 경매에 참가해서 기업을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법개정 후에는 기존 기업의 소유자나 점유자도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기존 기업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 경쟁력 회복의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 해당 기업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책임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7) “Sondervermögen des Bundes”.

서 법적용기간이 확대되었다. 기업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行政機關의 效率性 提高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아직도 매우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市場經濟는 능률적인 행정 없이는 제대로 될 수 없다. 물론 통일 이래 西獨의 인원을 신연방주들에 파견하고 東獨의 공직자들에게 밀도 높은 연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西獨의 공직자들이 東獨 근무를 기피하고 東獨 공직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강제적으로 東獨地域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소기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해서 의견이 갈린다. 東獨 근무 西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보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東獨으로 가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동포애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이상주의에서 출발하여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東獨地域으로 가는 경험 많은 공무원의 숫자가 현재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對 蘇聯 및 東歐 貿易

蘇聯 및 동유럽 나라들과의 전통적인 무역관계에 수많은 기업들이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통일 후에 이 무역이 어렵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맥을 끊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적 무역대상국은 蘇聯이다. 통일 전 東獨의 대외무역의 70%가 전체 코메콘 나라들과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40%가 蘇聯과 이루어졌다.

信託管理廳의 業績

信託管理廳의 역할과 어려운 형편에 관해서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그간의 업적을 약간 소개하고자 한다.²⁸⁾ 총체적으로 보아 信託管理廳의 사업이 분명

28) 이하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 616.

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유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信託管理廳은 약 70억 마르크의 판매소득을 올렸고 400,000이 좀 못 미치는 일자리를 지켜냈다. 향후 수년간 信託管理廳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구매자들이 550억 마르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15,000개 이상의 교역업체와 숙박업소, 1,000개를 약간 밑도는 약국과 200개 이상의 지방 호텔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信託管理廳이 기업을 사유화할 때 판매가격의 최대화가 아니라,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흔히 기업 판매를 결정할 때, 가격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가, 구매희망자의 신용도와 기업의 투자 약속을 통해 본 확실한 장래전망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이 유리하게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면 가격이 좀 낮더라도 해당기업을 매각한다는 뜻이다.

信託管理廳이 외형상 세계 최대의 재벌이기는 하지만, 기실은 매우 가난한 재벌이다. 기업을 매각처분할 때, 대개의 경우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매각시에 대체로 信託管理廳側이 해당 기업이 과거에 진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부채 총액은 약 1,000억 마르크라고 한다. ;또 信託管理廳이 대개 환경오염 관련 과거의 부담을 대부분 부담하고, 매입자측은 근소한 부분을 부담한다. ; 信託管理廳은 흔히 불안정한 주문 내지는 과거에 수행된 주문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떠맡아야 한다. 연방재무성은 한 대내용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信託管理廳이 향후 10년간 부담하게 될 적자폭을 대략 4,000억 마르크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社會主義 計劃 經濟體制를 재활성화시키고 市場經濟體制로 전환시키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은 분명하다.

1991년 2월 현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獨逸의 정부·여당은 5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어 東獨地域의 經濟水準이 西獨에 근

접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었다. 사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탈리아가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로 양분된 것처럼, 獨逸도 동부와 서부간의 격차는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펴고 있었다.

1991년 1월에 슈피겔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東獨地域의 빈곤상태가 西獨地域의 복지상태로 전환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西獨人들은 평균 9.1년을, 東獨人들은 평균 7.2년을 예상한다고 대답하였다. 응답한 東獨人들의 7%가 1~3년을, 43%가 4~5년을, 41%가 6~10년을, 7%가 11년 이상을 예상하였다.²⁹⁾ 1990년 12월 2일의 총선거를 앞두고 헬무트 콜 총리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향후 3,4년 내에 東獨은 융성할 것이다.”라고 장미빛 사진을 제시하였다. 몇 달 후에 대부분의 東獨人들은 이 말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콜 총리도 1991년 1월의 對國會 政府宣言에서 그의 전망을 반복하지 않았다.

1991년 여름 현재, 東獨經濟에 대한 독일 내의 엇갈리는 전망들을 살펴보자. 콜 총리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동부지역의 경제가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앵홀름(Björn Engholm) 사민당(SPD) 당수는 거의 매일같이 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통일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 경제가 새출발하고 있다는 최초의 조짐이 나타났다. 몇몇 업종에서 이미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호황을 보도하는 개별 기업까지도 있다. 독일연방은행은 금년 6월 조사보고서에서, “내리막길이 끝났다는 최초의 조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슐레징거(Schlesinger)신임 총재는 심지어 얼마 안가서, 늦어도 1992년에는 東獨地域에서 성장률이 기록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³⁰⁾

일부 업종에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리막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업자수는 증가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 문을 닫게 될

29) *Der Spiegel*, 6/1991(11. Febr. 1991), p.46.

30) *Der Spiegel*, 33/1991(1991. 8. 12), pp. 82~83.

것이다. 몰락과 새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비경제전문가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조그만 호황은 무엇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십억 마르크가 이전된 결과이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금년에만도 1,400억 마르크가 동쪽으로 송금된다. 서쪽은 東獨地域 국민총생산의 2/3 가량을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현 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마셜계획에 의한 원조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오늘날의 가격으로 계산할 때, 마셜계획은 西獨 國民 1인당 800마르크를 보조한 셈인데, 콜 연방정부의 계획은 東獨人들에게 11배를 지원하는 셈이다.

돈만 가지고 東獨地域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東獨地域의 공업생산이 經濟 및 通貨統合 1년 후 1/3로 감소하였다. 5개 신연방주의 국내총생산(GDP), 즉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체는 문헨의 Ifo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1991년에 전년 대비 약 2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름에 들어와서 경제몰락의 속도가 늦어졌다. 1990년 여름에는 東獨 企業 2 중 1이 생산량의 감소를 말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절반이 1991년 후반기에 受注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은 슈피겔지 최신히의 보도이다.³¹⁾

經濟 및 通貨統合 1주년을 맞이하여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와 킬 소재 세계경제연구소(Kieler Institut für Weltwirtschaft)는 공동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정부나 西獨 기업인들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동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³²⁾

東獨地域의 경제사정은 변함없이 심각하다. 생산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西獨에 주소를 둔 기업들은 1991년에 東獨地域에 신규 설비와 건설용으로 100억 마르크를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31) *Der Spiegel*, 33 / 1991(1991. 8. 12), pp. 82~83.

32) *Der Spiegel*, 27 / 1991(1991. 7. 1.), p. 24.

한다. 그밖에 토지매입과 관리기업의 인수 내지는 자본참여를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한다면 총투자의 규모는 15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1992년에는 170억 마르크가 투자될 것으로 추산된다.

東獨 소재 기업들의 투자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는 西獨 소재 기업들의水準에 훨씬 못미칠 것이다. 외국의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알아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기 두 연구소는 자체의 계산을 통하여 10억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기한 기업들의 예상 투자규모는 거의 전면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東獨 기업들의 현상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작은 것이다.

東獨의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많은 부분도 상실하였다. 근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東獨 기업들은 시장을 새로이 정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東獨 기업들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東獨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적절한 생산품과 생산절차를 갖고 있지 못하고 판로와 판매 전략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東獨의 많은 기업들은 결제수단은 얻을 수 있으나, 기업의 실질을 소모할 뿐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명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로는 무엇보다 투자재산의 매각을 들 수 있다. 원료와 반제품의 경매도 이에 해당한다. 전체 기업비용의 일부에 불과한 노임을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가공 주문을 받는 것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게 먹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東獨地域은 공업건설을 완전히 새로 시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채산이 맞지 않는 제조업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고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극히 좋지 않은 것이다. 蘇聯에 대해서도 판매시장으로서의 비중을 너무 크게 두어서는 안된다. 동유럽 무역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東獨地域의 공업이 받을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東獨地域의 기업들은 동유럽에서 과거에 누렸던 경쟁력과 관련된 특수 이점을 크게 상실하였다.

시 교훈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東獨地域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東獨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서방 측 商品과 완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신속한 經濟·通貨統合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獨逸 정부 여당의 주장이다. 국경개방 후 매일같이 2,000명 이상의 東獨人들이 西獨으로 넘어와 주택문제, 실업문제, 학교문제 등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어 東獨人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經濟·通貨統合이 불가피했고, 고르바초프가 그 무슨 개혁을 한답시고 국내에서 죽을 썩고 있을 때 오랜 숙원인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 東獨人들은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꿈에 부풀어 “西獨側에서 마르크화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쪽으로 넘어 가겠다.”고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여 西獨側을 위협하였다.

필자는 西獨의 정치지도부가 통일의 창문이 잠깐 열렸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함으로써 거의 포기상태에 도달하였던 민족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통일 후에 나타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한다.

끝으로 東西獨 經濟·社會統合 事例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독일의 경우는 東獨이 40년 가까이 지탱해 온 社會主義體制를 포기하고 서독의 資本主義體制에 편입된 사례이다. 이는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資本主義 市場經濟로 이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衝擊緩和裝置의 마련

東西獨 經濟·社會統合은 經濟的 合理性을 무시하고 政治優先主義에 밀려 충격완화장치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東獨의 생산품이, 1990년 7월 1일 발효한 經濟 및 通貨統合 이래, 밀물처럼 밀어닥친 西方商品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여 東獨地域의 모든 경제부문이 붕괴 직전에 있다. 그 결과 기업도산

과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북한이 計劃經濟를 포기하고 市場經濟를 선택하는 흡수통합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공업과 농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새로운 가입국은 다년간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평가도 하고 사회문제도 고려하여 선별적이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공업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연후에 자본주의 남한과 經濟統合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통일을 먼저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남북한이 '2개의 분할된 경제권역'으로 남아 있다가 경제력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경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치적 통합을 먼저 하고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一國 二體制'를 유지하는 통일방식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生産性 水準에 맞고 過渡期를 거친 通貨統合

東西獨間의 通貨統合時 물가, 임금, 소액저금과 관련해서는 1:1의 환율을, 기타의 경우에는 2:1의 환율을 적용하였다. 이는 두 경제간의 生産性 隔差를 반영하지 않은 통합이었다. 經濟統合 이전의 東西獨間 환율은 약 4.4:1 이었는데, 이는 두 나라간의 生産性 隔差를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生産性 水準을 초과하는 通貨統合의 결과 東獨經濟는 엄청난 환율상의 충격을 받은 것이다. 東獨商品의 국제시장가격이 갑자기 4.4배나 인상된 셈이다. 더구나 東獨經濟는 通貨統合과 함께 환율정책, 보조금 지원, 기타의 물가안정 수단을 상실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東獨經濟는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되었다. 이로 보아 우리의 경우 과도기 없이 성급하게 通貨統合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적 통일 후에도 북한지역에서 독자적인 환율정책과 외환관리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남북한간의 환율은 生産性 水準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價格體系의 調整問題

東西獨間의 신속한 經濟統合으로 인하여 東獨의 社會主義 價格體系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독의 市場價格體系가 東獨에 도입되면서 식료품 가격, 주거비, 연

료비, 광열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급상승하고 서방측의 상품가격은 크게 인하되었다. 과거 東獨에서는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필품, 주거비, 숙박비, 광열비, 공공요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였고 공산품 가격도 저렴하였다.

그 대신 서방측의 사치품이나 기호품 가격은 높게 책정하였다. 그래서 서독인이거나 외국인이 저렴한 東獨의 대중상품을 대량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價格體系의 개혁 없이 서독의 경제가 東獨의 경제를 ‘점거’한 것이다. 이에 東獨의 가계와 기업이 큰 충격을 받고 혼란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의 價格體系도 과거 東獨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經濟統合 전에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投資沮害要因의 優先的 除去

私企業의 투자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한, 투자보조금과 감가상각 특혜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대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法的 不確實性, 사회간접자본의 劣惡性,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와 같은 근본적인 투자저해요인을 정부는 우선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制度的 裝置의 漸進的 移轉

통독 후 서독의 각종 제도적 장치가 곧바로 東獨에 도입되었다. 그 결과 동유럽에서와 같은 혼란과 불안은 피할 수 있었지만, 반면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면에서 경직성이 강한 제도적 장치가 전환과정 중에 있는 東獨經濟에 일거에 적용되게 되어 난관도 조성하였다. 즉 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히 요청되는 柔軟性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市場經濟의 경험이 없는 東獨地域의 행정부처가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의 이행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밟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개혁은 처음에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법규와 기관의 창설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표현을 빌면, 통일 후 북한에 적용할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은

하되 이를 일거에 북한에 융통성 없이 적용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극히 적은 부분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사태의 진전을 보아가며 유연성 있게 이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所有權 問題는 賠償의 原則을 택할 것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소유권 문제는 아주 잘못 처리하였다. 이는 '독일식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통일조약을 마련할 당시에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한 결과,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시켜야 한다는 '반환의 원칙'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투자를 꺼리고 그 결과 국영기업의 私有化가 지연되어 엄청난 경제위기가 촉발되었다.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반환의 원칙' 대신에 '배상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生産性 水準에 맞는 賃金政策

東獨의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通貨統合 이후 상실되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게 되었다. 그외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후 生産性은 크게 떨어지고 공업부문의 노동비용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이 역시 東獨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된다. 남북한이 經濟統合을 할 경우에 지역간, 업종간 그리고 상품의 품질간에 존재하는 生産性의 隔差는 임금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 업종, 상품의 품질에 따라서 임금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비용이 生産性의 증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